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구독

2026.6.30.(화) 제26-39호
KOTRA 워싱턴 D.C. 무역관

KOTRA 미국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1회 배포합니다.



미국 경제통상 브리핑

주요 내용

미국 경제통상 포커스

- (자동차) 美 BIS, 커넥티드 차량 '적격 공급자 목록' 일반 허가 제도 공개 ····· 2
- (산업) 美 양자기술 육성 정책, 산업생태계 구축 단계로 확대 ····· 5

미국 경제통상 동향

- (관세) 美 CBP, 800달러 이하 소액 면세(De Minimis Exemption) 중단 규정 발표 ····· 9
- (규제) 美 상무부, 中 반도체 우회수출 차단 '강화 지침' 최종 제외 ····· 10
- (무역통계) 美 5월 상품 무역적자 14개월 만에 최대…2분기 성장률 하향 전망 ····· 10
- (투자규제) 美 상원, FTA·동맹국 대상 외국인투자 안보심사 역량 강화 추진 ····· 11

의회법안 동향 및 경제·통상 행사 안내

- (입법 동향) 인공지능, 공급망, 수출통제 관련 4건 ····· 12
- (경제·통상 행사) ITIF, 피터슨경제연구소 행사 2건 ····· 12

이시각 헤드라인

-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 13
-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 14

미국 경제통상 주요일정

7.1(수)	• 미 연준의장 케빈 워시 연설(Fed Chairman Kevin Warsh speech)
7.2(목)	• 미 6월 고용 보고서 발표(U.S. employment report)
7.3(금)	• 미 독립기념일 휴일(JULY 4th holiday, none scheduled)
7.7(화)	• 미 5월 무역수지(U.S. trade balance)

워싱턴 D.C. 포커스

(자동차) 美 BIS, 커넥티드 차량 '적격 공급자 목록' 일반 허가 제도 공개

■ BIS, 적격 공급자 목록 제도 도입… 신뢰가능한 공급망 중심 규제 체계 구축
■ 美 커넥티드 차량 공급망 규제, '개별 심사'에서 '사전 승인' 체계로 전환

1. 개요

□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커넥티드 차량 규칙**(15 CFR Part 791)」과 관련 **일반허가**(General Authorization) **제3호** 발표 (6.18.)

• 이는 특정 공급업체와 제품을 **사전 심사하여 승인**하는 '**화이트리스트' 제도**로서,

- 등록된 공급업체의 VCS(Vehicle Connectivity System) 하드웨어 및 유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별허가 없이 미국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허용

□ 중국·러시아 등 적성국 기술 규제 정책에 따른 **공급망 혼란 최소화 방안**

• 중국 등 관련 기술의 차량 내 탑재를 제한하는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자동차 공급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장치로 평가

2. 커넥티드 차량 규칙

□ BIS는 작년 1월 **중국·러시아와 연계된 차량용 소프트웨어·하드웨어**의 미국 내 차량 사용을 제한하는 **국가안보 규제**인 '**커넥티드 차량 규칙**'을 도입

• 규제 대상 품목에 대해서 미국 내 수입 및 판매를 제한하며, 중국 및 러시아 기업이 제조한 커넥티드 차량(OEM 생산)도 규제 대상에 포함

• 주요 규제 대상은 다음 두 가지 핵심 기술로 분류

- (1) **VCS (Vehicle Connectivity System)** : 외부 네트워크와 통신을 담당하는 시스템(Cellular Module, Wi-Fi Module, Bluetooth Module 등 포함)

- (2) **ADS (Automated Driving System)** :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하는 시스템으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주행 제어 알고리즘 등 포함

• 동 규칙은 2025년 1월 최종 규칙 확정 후, **2025년 3월 17일 정식 발효**

- 소프트웨어 규제는 2027년 모델 연도부터 개시되고, 하드웨어 규제는 2030년 모델 연도부터 적용(비모델 연도 적용분은 2029.1.1.부로 적용)

□ 미국 정부는 **커넥티드 차량**을 **국가안보 인프라로 인식**하고 **공급망 통제 강화**

• △차량 위치정보 수집 △운전자 행동 데이터 △차량 원격 제어 △OTA 업데이트 경로 △차량-클라우드 연결 등 기술을 국가안보 관점에서 관리

□ BIS는 작년 일반허가 1호·2호 제도를 통해 제한적인 예외 적용 기준을 마련

• (1호) 상업적 판매 목적이 아닌 **제한적 사용 또는 일시적 운행** 허용,
(2호) **제3국 수출**을 위한 일시적 **미국 내 반입·경유 허용**

• 이번 일반허가 제3호에서는 '**적격 공급자 목록' 제도를 신설**하여 신뢰 가능한 공급업체와 제품을 **사전에 승인하는 체계**를 마련

3. 일반허가 제3호 주요 내용

□ 적격 공급자 목록 제도 신설

• 자동차 부품 및 소프트웨어 공급업체가 BIS에 직접 신청하여 공급업체 또는 개별 제품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

- 승인된 공급업체와 제품은 적격 공급자 목록에 등재되며, 해당 제품은 별도 개별허가(Specific Authorization) 없이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가능

• 일반허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 제출 의무는 유지되며, 등록된 공급업체·제품 정보를 적합성 선언서에 기재 필요

* 적합성 선언은 "우리 회사는 커넥티드 차량 규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금지된 중국·러시아 관련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기업이 BIS에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법적 확인서

□ 신청 절차 및 심사 기준

• 해당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공급업체가 BIS에 직접 등록 신청

- 신청 기업은 해당 제품의 △기술적 특성 △국가안보 위험 분석 △위험 완화 조치 △보안 통제 체계 등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

• BIS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건별(case-by-case) 심사 시행

- 국가안보상 '과도하거나 수용 불가능한 위험(undue or unacceptable risk)'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격 공급자 목록 등재를 승인

□ 사후 관리 강화

• BIS는 승인 이후에도 공급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 실시

- 공급업체가 위험 완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새로운 국가안보 위험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허위 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목록에서 삭제 가능

• 일반허가를 활용하는 기업은 관련 기록을 10년간 보관 의무를 부담

- 공급망·제품에 중대한 변경 발생 시, 30일 이내 자체 평가를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BIS에 보고. BIS는 업체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과 실사 검증 권한 보유

□ 적용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은 일반 면제 3호 제도 활용 불가

- ⑴ BIS로부터 일반허가 이용이 제한된 기업 또는,
  ⑵ 외국 적대국(Foreign Adversary) 정부의 소유·지배 또는 통제받는 기업

▪ 작성자	워싱턴 D.C.무역관 이정민
▪ 자료원	BIS 홈페이지(6.18), Honigman('25.12.10)

(산업) 美 양자기술 육성 정책, 산업생태계 구축 단계로 확대

■ 트럼프 대통령, 양자혁신·양자내성암호(PQC) 행정명령 2건 서명(6.22)
■ 미국의 양자기술 리더십 유지와 보안 위험 대응을 위해 산업생태계 구축 및 PQC 전환 추진
■ 공급망·제조기반·인력 확보가 양자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

1. 개 요

□ 트럼프 행정부, 양자기술 육성 정책을 산업생태계 구축 단계로 확대

- **트럼프 대통령은 양자혁신 및 양자내성암호(PQC) 관련 행정명령 2건*에 서명하고, 양자기술 상용화와 연방기관 암호체계 전환을 추진(6.22)**

* ① 행정명령 14412호 「Securing the Nation Against Advanced Cryptographic Attacks」
② 행정명령 14413호 「Ushering in the Next Frontier of Quantum Innovation」

- 백악관은 양자기술 발전에 따른 보안 위험에 대응하고 미국의 양자기술 리더십 유지를 위해 양자혁신과 산업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할 필요성을 제시

- 양자혁신과 양자내성암호(PQC) 전환을 통해 기술 경쟁력과 국가안보 강화를 추진

- **양자기술 개발을 넘어 상용화, 제조기반 구축, 공급망 강화 및 민간기업 참여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

- 양자 공급망 분석, 제조장벽 해소, 핵심 부품기술 개발 및 양자칩 제조 인프라 접근성 확대 등을 별도 정책 과제로 포함

2. 상세 내용

□ 양자혁신 및 산업생태계 구축 추진

- **국가 양자전략에 양자기술 상용화·배치 및 산업협력 확대 반영**

- 국가 양자전략을 180일 내 업데이트하도록 하고, 상용화·배치 및 산업 파트너십 확대를 국가 양자전략에 포함하도록 명시

- 연구성과의 상용화와 산업계 활용을 촉진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할 고성능 양자컴퓨터 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

□ 양자내성암호(PQC) 전환 및 사이버보안 강화 추진

- **연방기관의 양자내성암호(PQC)* 전환을 가속화하고, 양자컴퓨팅 발전에 따른 기존 암호체계의 보안 위험 대응 강화**

  * PQC(Post-Quantum Cryptography): 양자컴퓨팅 발전에 대비해 기존 공개키 암호체계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차세대 암호기술

  - 백악관은 양자컴퓨팅 발전으로 기존 암호체계가 보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

  - 관계기관은 범정부 PQC 전환 로드맵과 기술지침을 마련하고, 연방기관의 단계적 전환과 이행체계 구축을 추진

  - 상무부는 '27년 말까지 PQC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해 연방기관의 연방기관의 PQC 전환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

  - 주요 연방 정보시스템의 암호체계를 PQC로 전환하고, ▲암호키 설정(key establishment)은 '30년 말까지 ▲디지털 서명은 '31년 말까지 단계적 전환 추진

□ 양자혁신 행정명령의 관계부처별 주요 추진 과제

- **(에너지부)** 「과학 분야 발견 및 개발 가속화를 위한 양자컴퓨팅(QC-ADDS)」 추진

  - 2028년 구축 완성을 목표로 에너지부 산하 시설을 활용해 과학 응용용 양자컴퓨팅 역량을 구축하고, 연구 활용을 확대할 계획

- **(상무부)** 양자기술 공급망 평가, 제조장벽 해소 및 신뢰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사전시장확약(AMC)을 통한 초기 시장 창출 지원

- **(상무부·관계부처)** 양자기술 구현에 필요한 핵심 부품·장비의 미국 내 공급망 및 제조역량 확보 방안 마련

- **(국방부)** 양자칩·양자소자 개발을 위한 제조 인프라 접근성 확대와 차세대 양자센서 개발 및 실증 추진

- **(국립과학재단, NSF)** 국가 양자·나노기술 인프라 프로그램을 활용한 양자정보과학기술(QIST) 사용자 시설 구축 지원 추진

□ 동맹국 중심 협력 및 기술보호 추진

- **미국 양자 및 양자 기반기술 기업의 전략시장·우호국 자본 접근을 지원하고, 동맹국과의 기술협력 및 공급망 공조를 확대**
  - 동맹국 및 파트너와 공급망, 연구보안, 수출통제·투자제한 정책 공조 추진
  -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자문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양자 방첩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등 연구보안과 민감기술 보호 추진

〈트럼프 행정부의 양자기술·사이버보안 정책 추진 경과〉

시기	주요 조치	핵심 내용
'18.12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법(National Quantum Initiative Act) 제정	미국 최초의 범정부 양자기술 전략 수립
'20	연방 양자 R&D 투자 확대	양자기술 R&D 투자 확대
'25.6	사이버보안 강화 행정명령	외국발 사이버 위협 대응 강화
'26.3	「Cyber Strategy for America」 발표	양자기술 확산 속 미국의 사이버 우위 확보 및 국가안보 강화 방향 제시
'26.6	국가안보시스템(NSS) 사이버보안 대통령 각서(NSPM) 서명	국가안보 시스템 보호 및 군·정보기관 사이버 방어 강화
'26.6	양자혁신·양자내성암호(PQC) 행정명령 발표	양자기술 상용화 및 양자내성암호 전환 가속화

[자료: 백악관 팩트시트 종합]

3. 반응 및 시사점

□ 양자정책, 산업생태계 구축으로 확대

- **동 행정명령은 양자기술 정책의 중심이 연구개발에서 상용화·배치 및 산업생태계 구축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
  - 양자기술을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로 육성하고 산업·안보 정책과 연계해 국가 경쟁력과 안보를 함께 강화하려는 방향을 제시
  - 양자시스템의 실제 활용 확대를 위해 고성능 양자컴퓨팅 역량, 전문인력 및 산업계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

□ 공급망·제조기반 및 인력 확보 중요성 부각

• 양자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급망, 제조기반 및 인력양성의 중요성이 부각

- 양자기술 경쟁력이 연구개발뿐 아니라 제조역량, 공급망 안정성 및 상용화 기반 확보와도 밀접하게 연계된다는 점에 주목

- 연방정부의 투자와 초기 시장 창출, 연구 인프라, 제조, 인력 개발 및 상용화 지원이 미국의 양자기술 리더십 유지에 핵심 요소로 부상

□ PQC 전환과 보안체계 변화

• 양자기술 육성과 PQC 전환을 병행하며 기술혁신과 보안 대응을 함께 추진

- 양자컴퓨팅 발전에 따른 기존 암호체계의 보안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방기관의 PQC 전환을 가속화

- 2030~2031년 연방 전환 일정, 2027년 시범사업, 2030년 연방 계약업체 관련 기한이 향후 민간 부문의 보안 기준으로 확산될 가능성

- 향후 양자기술 분야에서도 연구보안, 공급망 관리 및 기술보호 정책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관련 수출통제 조치도 강화될 가능성

▪ 작성자	워싱턴 D.C.무역관 김예나
▪ 자료원	백악관(6.22, 6.22), 로이터(6.22), Mayer Brown(6.24) 등 현지 언론 및 로펌 종합

미국 경제통상 동향

(관세) 美 CBP, 800달러 이하 소액 면세(De Minimis Exemption) 중단 규정 발표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800달러 이하 저가 수입품 대상 '소액 면세(De Minimis Exemption)를 무기한 중단'하는 규정을 발표(6.24)

- 이번 조치는 국제우편망*과 비우편 경로(항공·해상·특송 등) 모든 운송 소액 우편물에 일괄 적용되며, '26년 6월 24일부로 발효

* 국제우편망은 소액 면세 중단 행정명령에서는 제외되었으나 6월 24일 면세 중단 발표, 신규 약식통관절차는 7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일부 품목은 10월 22일까지 유예기간 적용

• CBP, 행정명령과 별개로 관세법상 자체 권한에 근거해 소액 면세 중단 규정화

- CBP는 1930년 관세법(Tariff Act) 321조에 근거해 CBP 자체 권한으로 기존의 소액 면세 행정명령이 무효화 될 경우, 면세 중단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

*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25년 8월 29일부로 국제 우편물을 제외한 800달러 이하 소액 수입품 대상 De Minimis 면세를 공식적으로 중단하는 임시 조치 시행 중이었음.

〈CBP 소액 면세 중단 조치 주요 내용〉

항목	국제우편망 경로 (신규 추가 조치)	비우편 경로 (기존 중단 조치 규정화)
대상	우편으로 배송되는 $800 이하 우편물	우편 외 모든 경로(항공·해상·특송 등)의 $800 이하 화물
면제 중단 발효	2026.6.24 (즉시)	2026.6.24 (즉시)
변경 절차	신규 전자 약식통관절차 신설, 보증증권 의무화 및 수기 입국신고서 작성 폐지	기존 정식 통관 또는 약식 통관(Entry Type 11)으로 전환 (신규 절차 없음)
신규 절차 발효일	2026.7.24	-
데이터 제출 방식	월 1회 엑셀 일괄 제출(원산지, HTSUS 10자리, 관세율, 총관세액 등을 신고인이 익월 7일까지 제출)	건별 ACE 전자신고(정확한 원산지·제조사·성분 데이터 즉시 제출)
유예 종료일	2026.10.22 (PGA* 규제 대상, 특정 관세 부과 품목 등에 한해 신규 절차 이용 가능) * 다른 연방기관의 승인허가검사서류 제출이 필요한 품목	-
의견 제출 마감	2026.7.24	게재 후 30일(2026.7.24)

[자료: 연방관보]

▪ 자료원 | 폴리티코(6.24) 연방관보(6.24), (6.24)

(규제) 美 상무부, 中 반도체 우회수출 차단 '강화 지침' 최종 제외

- **美 상무부가 6월 17일 발표한 반도체 수출통제 지침에서 TSMC 등 파운드리를 직접 겨냥한 대중 우회수출 차단 문구 삭제**

- 당초 상무부 산하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는 제3국 중개업체를 통한 중국행 첨단 반도체 수출을 라이선스 없이 금지하는 문구 포함을 검토하였으나,

- 해당 표현은 중국 반발 및 미·중 관계 악화를 우려해 최종 지침에서 빠진 것으로 분석

- **기존 규정 재확인 수준, 미 행정부 내 대중 반도체 통제 수위 이견 노출**

- 최종 지침은 첨단 AI 칩을 포함한 서버 등에 수출허가가 필요하다는 원칙만 명시하고, 파운드리(제조사)에 대한 직접 규제는 제외

- 5월 31일 지침에서 해외 법인에도 규제가 적용됨을 밝혔으나, 파운드리의 실사·검증 의무는 여전히 불명확한 상황이라 제도 혼선은 지속 전망

-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BIS)는 현행 규정으로도 중국 기업에 대한 첨단 AI 칩 공급 및 제3국 우회수출은 불법이라는 입장

- 현지에서는 행정부 내에서는 우회수출 차단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과 추가 규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관계 개선 기조와 상충될 수 있다는 가능성 제기

▪ 자료원 | 연방관보('25.1.16), BIS (5.31), 폴리티코(6.23)

(무역통계) 美 5월 상품 무역적자 14개월 만에 최대…2분기 성장률 하향 전망

- **미국 5월 상품 무역적자 확대, 선제 수입 증가와 수출 감소로 14개월 만에 최대**

- 미 상무부는 5월 상품 무역적자가 전월 대비 27.4% 증가한 1,058억 달러를 기록하며 14개월 만에 최대 수준으로 확대됐다고 발표

- 자동차·소비재 중심 수입이 3.6% 증가한 반면, 소비재·산업재·자본재 수출은 감소하며 무역수지가 악화

- 중동 분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으로 기업들의 선제적 수입이 확대됐으나, 평화 협상 이후 해협 통항 회복으로 글로벌 교역 여건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

• **AI 투자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로 무역적자 확대, 2분기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힘입어 자본재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41.9% 증가하며 AI 투자가 수입 증가세를 견인할 전망

- 모건스탠리는 미국 2분기 GDP 성장률을 2.5%에서 2.1%, 골드만삭스는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하며 무역 부문이 2분기 연속 성장의 하방 요인으로 분석

- 도·소매 재고 증가로 일부 수입 물량이 재고로 축적되면서 무역적자 확대에 따른 성장 둔화 영향을 일부 상쇄할 가능성도 제기

▪ 자료원 | 로이터(6.26), 블룸버그 거버먼트(6.26)

(투자규제) 美 상원, FTA·동맹국 대상 외국인투자 안보심사 역량 강화 추진

• **美 상원의원, 동맹국의 외국인투자 안보심사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Securing Partner Supply Chains Act(S.4899)'를 발의**

* 팀 케인(민주, 버지니아)·존 커티스(공화, 유타) 의원이 발의, 美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에 준하는 국무부 주도 '외국인투자심사 지원 이니셔티브' 신설 추진

- 법안은 美 FTA·상호방위조약 체결국을 파트너국으로 정의하며, 국무부가 기술지원·교육 등을 통해 핵심 인프라·공급망 안보위협 심사 역량 구축을 지원하도록 규정

* 동 이니셔티브는 시행 5년 후 자동 종료되며, 국무부 장관은 4년간 의회에 지원 현황·파트너국 진척도·신규 위험 요인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

- 케인 의원은 중국의 세계적 영향력 확대 속 동맹국의 투자심사 역량 확보가 美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법안이 동맹국 경제 보호 및 핵심 인프라·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통제 차단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

- 커티스 의원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통한 핵심산업·인프라 영향력 확대에 대응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멕시코·브라질·파나마 항만 및 볼리비아 핵심광물 분야의 중국 진출 사례를 주요 배경으로 제시

- 하원에서는 호아킨 카스트로(민주, 텍사스)·영 김(공화, 캘리포니아) 의원이 발의한 동반 법안(H.R. 7675)이 지난 3월 외교위를 43대 3으로 통과한 상태로, 상·하원의 초당적 지지를 확보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거론

▪ 자료원 | 인사이드(6.29)

⚖ 의회법안 동향

구분 (현행일)	법안 (발의일)	대표 발의자	법안 및 주요 내용
인공지능 (6.24)	H.R.9442 (하) (6.24)	Alexandria Ocasio Cortez (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모라토리엄법 (Artificial Intelligence Data Center Moratorium Act)〉 ▪ AI의 경제·환경·안전 영향에 관한 종합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과 기존 시설 확장을 일시 중단하도록 규정하는 법안
공급망 (6.24)	S.4882 (상) (6.24)	Tim Scott (공)	〈정보통신기술 공급망 안보 강화법〉 ▪ 미국의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수출통제개혁법을 개정하려는 법안
수출통제 (6.24)	S.4883 (상) (6.24)	John Kennedy (공)	〈수출통제개혁법(ECRA) 제재 강화법(Export Control Reform Act of 2018 (ECRA) Penalty Increase Act)〉 ▪ 민감한 미국 기술을 외국 적대국 또는 불법 행위자에게 불법 수출·재수출·이전하는 경우 부과되는 민사 제재를 강화하는 법
공급망 (6.26)	S.4899 (상) (6.26)	Tim Kaine (민)	〈해외투자 심사 이니셔티브 설립법(Securing Partner Supply Chains Act)〉 ▪ 국무부가 동맹국의 외국인투자 심사체계 구축·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지원, 교육, 규제 자문 등을 제공 ▪ 자유무역협정 또는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국가를 파트너국으로 정의하고, 민관 협력·위험 평가·진척 점검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

* 6월 30일(화) 15시 모니터링 기준

⚖ 경제·통상 행사 안내

주관	일시(EST)	행사명	원문
ITIF	7/8 2:00 pm	〈How Should the US Respond to Foreign Regulation of Online Speech?〉 ▪ GRANITE 법안(해외 정부의 미국인 온라인 발언 규제에 대응.규제하는 법) 설계자와 주요 전문가들이 해외 온라인 규제가 제기하는 문제와 정책 대응 방안 논의	링크
Peterson	7/8 9:00 am	〈EU-India free trade agreement: The mother of all deals?〉 ▪ EU-India FTA 발효 시 상품·서비스·디지털 무역·투자·공급망을 포괄하며 투명한 규범 기반 교역 의지를 보여줄 이 협정의 실제 내용과 초기 영향 논의	링크

* 6월 30일(화) 15시 모니터링 기준

현지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The Wall Street Journal	World Trade Rose in April, a Fresh Sign of Resilience (4월 세계 교역량 증가…글로벌 무역 회복세 보이나)
	전달 대비 전세계 교역량이 0.7% 높아졌으며 인공지능 관련 투자 확대가 지속되면서 반도체와 기타 전자장비 교역이 증가해 세계 교역 회복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나
The Washington Post	Supreme Court upholds principle that almost all born on U.S. soil are America (연방대법원, '미국 출생자 시민권' 원칙 유지)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원칙을 유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제한 시도에 제동
The New York Times	Shipping Traffic in Strait of Hormuz Picks Up Again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 재개 움직임 보여)
	수개월간 발이 묶였던 선박들이 다시 대규모로 이동하기 시작했지만, 주말 사이 이란과 미국이 공격을 주고받은 뒤 상당수 선박은 다시 운항을 줄인 것으로 나타나
CNN	South Korea to invest $576 billion in AI chip production (한국, AI 반도체 생산에 5,760억 달러 투자한다)
	한국 정부는 월요일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수년간 5,76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AI 반도체 산업에서 압도적인 주도권을 굳히겠다고 밝혀
Bloomberg	US Says $11.4 Billion Tied Up in IEEPA Tariff Refund Appeal (미국 정부 "IEEPA 관세 환급 항소에 114억 달러 묶여")
	한 판사는 미 연방대법원에서 무효화된 관세를 전액 환급하라는 명령에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수입업체들이 환급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더 지연시킬 뿐이라고 지적

* 미국 동부 시간 6월 30일 16시 기준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 **'26년 무역기술장벽(TBT) 심층분석보고서 산업계 의견수렴**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 ☞KnowTBT☜)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로 무역기술장벽이 급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TBT 정보를 전파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심층분석보고서 의견수렴 요청목록은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규제대응 해소신청**' 버튼 클릭 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6-21	美 AI 보안 검증 행정명령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6.6월
US26-20	트럼프 대통령 세관 집행 강화 행정명령 주요 내용 및 우리 기업 시사점	2026.6월
US26-19	OECD「Steel outlook 2026」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6.6월
US26-18	미국 중간선거 5월 경선 결과 및 향후 주요 일정	2026.6월
US26-17	미·중 베이징 정상회담 이후 후속 현지 동향 및 전망	2026.6월
US26-16	美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재검토 추진 현황 및 현지 반응	2026.5월
US26-15	美 국제무역법원의 무역법 122조 관세 위법 판결 주요 내용 및 전망	2026.5월
US26-14	美 하원 반도체 수출통제 입법 패키지 의결 동향 및 주요 내용	2026.5월
US26-13	美『국방물자생산법』을 통한 에너지 공급 확대 정책 동향과 시사점	2026.5월
US26-12	美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제품 232조 관세 개편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6.4월
US26-11	2026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Report) 주요 내용	2026.4월
US26-10	제14차 WTO 각료회의 주요 논의 동향 및 향후 전망	2026.4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게재일	제목	바로가기
2026.5.28.		
2026.2.6.		

문의	이메일	전화
	jwshim@kotra.or.kr	+1) 202-857-7919
	shim.nature@kotra.or.kr	